의안
번호

120

서울특별시 성북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(안)

검 토 보 고 서

보건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성북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23. 04. 18.

전문위원 김 동 성

1. 제안경위

가. 제 출 자 : 정해숙 의원 외 6명

나. 의안번호 : 제120호

다. 제출일자 : 2023. 04. 07.

라. 회부일자 : 2023. 04. 11.

2. 제안이유

- 정보통신기술과 디지털 기기가 발달함에 따라 이를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음. 피해자의 인격권과 사회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지원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성북구민의 인권증진 및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제안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디지털성범죄의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와 계획의 수립 등을 규정(안 제3조~제4조)
- 다. 교육 및 홍보와 피해자 보호를 규정(안 제5조~제6조)
- 라. 예산의 지원 및 비밀준수 의무를 규정(안 제7~제8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입법예고
 - 기 간 : 2023. 04. 07. ~ 2023. 04. 12.
 - 의 견 : 의견 없음.

5. 검토의견

□ 개요

- 본 제정안은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상대방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불법 촬영물을 유포·협박·저장·전시하는 등 온라인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고 그 양상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어,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성북을 조성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 발생 예방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·홍보 및 피해자 보호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.
-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2021년 지원현황을 보면, 2021년 지원 건수는 188,083건으로, 2020년 대비 약 1.1배, 피해자는 6,952명으로 1.4배 증가하였으며, 2019년 이후 지원 건수 및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.

<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지원현황 >

기간	피해자 (명)	지원건수(건)				
		합계	상담지원	삭제지원	수사·법률 지원연계	의료지원연계
2019	2,087	101,378 (100.0%)	5,735 (5.7%)	95,083 (93.8%)	500 (0.5%)	60 (0.1%)
2020	4,973	170,697 (100.0%)	11,452 (6.7%)	158,760 (93.0%)	445 (0.3%)	40 (0.02%)
2021	6,952	188,083 (100.0%)	17,456 (9.3%)	169,820 (90.3%)	708 (0.4%)	99 (0.1%)

<출처 : “한국여성인권진흥원(2022), 「202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」>

□ 주요내용

가. 안 제2조(정의)

- 디지털성범죄 정의를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4조부터 제14조의3까지 및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1조를 근거로 폭넓게 규정함.

나. 안 제3조(구청장의 책무) 및 제4조(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)

- 구청장의 책무와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 및 인식개선 지원 등에 관해 필요한 시책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디지털 성범죄 예방·대응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와 관련 공공기관 등과 협조 요청 사항을 명시함.

라. 안 제5조(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)

-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성북구에 포함된 각종 기관(시설) 등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 시 디지털성범죄 관련 교육을 병행·추가토록 규정함.

마. 안 제6조(피해자 보호 및 관계기관 협력) 및 제7조(예산의 지원)

- 구청장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의료기관, 교육기관, 수사기관 및 피해자 관련 시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,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해 피해자 상담을 비롯한 보호·법률·의료지원 등 구체적인 사업을 명시함.

바. 안 제7조(예산지원)

-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 지원사업 수행에 수반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.

사. 안 제7조(비밀준수)

-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에 대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.

□ 종합의견

- 본 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그 양상이 갈수록 다양해짐에 따라 이에 관한 예방 및 교육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성북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,
- 상위법인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¹⁾에서 지방자치단체에 ‘성폭력’에 대한 신고체계 구축, 조사·연구, 피해자 지원, 법률구조 및 관련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등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가능하다 판단됨.
- 본 제정안과 관련 상위법령인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,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은 성폭력범죄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나, 제정안은 성폭력범죄 중 디지털 매체의 특수성으로

1)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(이하 “피해자”라 한다)를 보호·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1.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·운영
2.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·연구, 교육 및 홍보
3. 피해자를 보호·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·운영
4.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,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지 지원
5. 피해자에 대한 보호·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·운영
6.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
7.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·시행 및 평가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인하여 매우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‘디지털 성범죄’에 관한 사항에 초점을 맞춰,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임.

- 참고로, 타 자치구 입법 사례를 보면, 서울에서는 서울시를 포함 8개 자치구 (강동, 노원, 도봉, 양천, 성동, 강북, 구로, 동대문)에서 시행하고 있으며, 전국적으로는 교육청을 포함하여 9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음. 이 중 공중화장실로 국한한 디지털성범죄 관련 조례는 9개(고양시, 밀양시, 오산시, 원주시, 포천시, 봉화군, 양구군, 청송군, 포천시)가 제정되었음.

관 계 법 령

□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, 아동·청소년을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·연구·교육 및 계도와 더불어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.

② 국가는 아동·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가 국제적 범죄임을 인식하고 범죄 정보의 공유, 범죄 조사·연구, 국제사법 공조, 범죄인 인도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.

제11조(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·배포 등) ①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·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

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·대여·배포·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·운반·광고·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

③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·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·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

④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·청소년을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

⑤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·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

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

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.

□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

제3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(이하 “피해자”라 한다)를 보호·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1.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·운영
 2.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·연구, 교육 및 홍보
 3. 피해자를 보호·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·운영
 4.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,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지 지원
 5. 피해자에 대한 보호·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·운영
 6.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
 7.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·시행 및 평가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5조(성폭력 예방교육 등)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, 「유아교육법」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,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,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(이하 “국가기관등의 장”이라 한다)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, 기관 내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, 사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·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,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□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

제13조(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)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, 우편, 컴퓨터,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, 음향, 글, 그림,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제14조(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)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(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반포·판매·임대·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·상영(이하 “반포등”이라 한다)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(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)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(이하 “정보통신망”이라 한다)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

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·구입·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.

제14조의2(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)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·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·영상물 또는 음성물(이하 이 조에서 “영상물등”이라 한다)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·합성 또는 가공(이하 이 조에서 “편집등”이라 한다)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·합성물·가공물(이하 이 항에서 “편집물등”이라 한다) 또는 복제물(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

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.

제14조의3(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·강요)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(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)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

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.